# 국민의당 도당, 더민주 협치 존중 강조

## ‘국민의당 도의회 의장단 · 상임위장 배분 반대’ 결의 더민주 의원 총회 관련 “제1야당의 배려심 지켜야”

국민의당 전북도당(이하 전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선제적 협치 존중을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더민주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0일 의원 총회를 통해 국민의당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서 “이 방식은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아니기에 국민의당 소속 대표단과 협치 과정을 통해 상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더민주는 자리를 두고 다투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많은 도민들의 염원과 정권창출에 대한 상생협력 관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더민주는 제1야당의 자존심과 배려심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20대 총선에서 더민주가 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만심과 독선”이라며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근원이 되는 지방자치의 도의회 원내구성이기에 더민주는 지금까지 행태를 반성하고 도민 민심을 얻는데 국민의당과 함께 가야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치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며 화해하고 이해하는 자세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더민주 원내 핵심 관계자가 말했던 ‘국민의당은 우리에겐 공조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말을 전북도 더민주 소속 도의원들은 심도있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당은 “우리는 전북 발전을 위해 정권창출을 해야 할 책무가 큰 야당이다. 이제 그 뜻을 모아 국회가 협치로서 함께 일어서기 시작한 마당에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협력하고 협치를 이뤄야할 공동 운명체이다”며 “전북도의원들이 협업하지 않고 협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전북도민들은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혐오감으로 가중시킬 것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 도의회 환복위, 남원 ‘평화의집’ 방문
## 장애인 인권실태 등 점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남원 ‘평화의집’을 방문해 장애인 인권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날 환복위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 집’에서 원장 대행인 사무국장으로부터 시설 운영현황 및 인권침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조치 여부, 거주인 전원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위원들은 공정한 진상조사 실시와 시설 폐쇄 및 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어 주요시설을 점검한 뒤 피해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치료, 보호자 상담을 통해 적합 시설로 전원 연계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강영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보살펴야 할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은 물론 도 차원에서 인권전문가 등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해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 정의당 추혜선 비례대표 의원 미방위 배정 불발 반발 농성

정의당은 14일 자당 소속 언론 전문가 추혜선(비례대표)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된 것에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추혜선 의원을 외통위로 배정한 것은 부당하다.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또 이런 일이 추혜선 의원은 물론이고 정의당 원내지도부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전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상임위원장을 나누면서 제대로 일해 보겠다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비교섭단체라고 또 무소속이라고 소명을 꺾는 일은 너무나 부당하다”며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서부터 또 사보임까지를 포함해 이 부당한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당 원내지도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아무런 이유없이, 근거없이, 명분없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마치 저 외딴 섬에 유배시키듯이 상임위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추 의원은 “비틀거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곧추세우는 첫걸음은 언론의 제자리 찾기, 방송의 정상화로 시작해야 한다는 게 20년 언론운동을 해온 나를 지탱한 가장 큰 원칙”이라며 “그것을 위해 내가 미방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나는 여기서 농성을 시작하며 국회의장의 판단을 기다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외통위 배정에 항의하는 뜻에서 이날 오후 현재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성주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지원, 외교통일위원회 배정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춘석, “‘소스산업화센터’ 익산 선정”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국내 소스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소스산업화센터’의 건립지로 익산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총 사업비 80억 원(국비 70억, 지방비 10억)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6,611㎡ 부지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착공 및 12월 완공될 예정이며, 클러스터지원센터 내에 별도의 부설조직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소스산업화센터 용역비 6억을 최초로 편성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에도 설계비 6억 원을 추가로 반영시킨 바 있다.

소스산업화센터가 조성되면 올해 말 완공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R&D 허브 기능과 소스특화 장비구축 등 발효원료를 기반으로 한 소스산업 육성 지원을 감당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익산 소스산업화센터는 연평균 5%에 달하는 세계 소스시장에 우리기업이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 입주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도의회 문건위, 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4일 제333회 정례회 기간 중 정읍 태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문건위원들은 공사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정읍 태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공사현장에 반영된 우수관로 정비 방안 등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와 품질 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일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비가 올 때마다 저지대 주민들과 배수가 불량한 지역의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예방사업장 등을 적극 방문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집행잔액 발생 예측 사업은 과감한 추경 삭감을”

### 도의회 행자위, 소방본부 · 감사관실 · 대외협력국 · 공무원교육원 결산 심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방본부, 감사관실, 대외협력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양성빈 위원장(장수)은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개최 등 대외협력국 소관 7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5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과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추경 삭감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최근 남북관계가 긴장고조 국면으로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의 대북정책 틀 안에서 우리 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철 의원(전주7)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이 총 10개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약 1,239만원 등 인건비성 경비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인건비 특성상 집행잔액이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즉각 투자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 운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성환 의원(전주3)은 “집행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약 1,115만원, 기타보상금 약 6,241만원을 추경 시 조정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후 불요불급한 사유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에 바로 조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소방본부에서 약 2,2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는데, 재원이 부족한 전북도 입장에서는 결손처분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전에 징수를 게을리 하지 않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 예측이 가능한 세입은 예산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도청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됐지만,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사업이 지연돼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후에는 이런 예가 없도록 부서 간 협업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광영 기자

## 새누리, 12년만 집단지도체제 폐지

새누리당이 12년만에 집단지도체제를 폐지하고 당 대표 체제인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탄핵 역풍 뒤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이 체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총선 참패의 한 원인으로 무기력한 당 대표 체제가 지목되면서 중구난방식 집단지도체제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집단지도체제 폐지 결정을 발표했다. 권 사무총장은 “대표최고위원 명칭은 당 대표로 변경한다”며 “최고위원과 최고위 회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권 총장은 “집단 지도체제 하에서 합의적 운영의 한계점을 노출됐고 당 혼선과 마비를 불러온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당대표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부여하는 게 효율적 당 운영을 위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대표가 법적, 대외적으로 당대표를 할 뿐이었지 당무를 총괄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당무를 총괄한다는 규정을 집어넣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권 총장에 따르면 오는 8월 9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부터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 방식이 적용된다. /이성주 기자

## 朴대통령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 공공기관장 워크숍 주재…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및 기능조정과 관련해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저는 올해 우리 공공기관들이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 없이 완성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 가운데에서도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과제는 되면 좋지만 안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도 있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우수인재들을 길러내기도 힘들다”며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지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자연히 조성돼서 무사안일주의도 개선하게 되고, 조직의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은 이미 1999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간부직도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제도를 도입해서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 최영규, ‘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최영규 도의원이 첫 입법 활동으로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최 의원은 4·13 재보궐 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했다.

지난 7일 개회한 제333회 정례회 기간 논의될 이번 조례안은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 등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재능기부 저변확대일환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최영규 의원은 “재능기부는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부를 받아야 할 대상과 재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기부형태가 자리 잡고 지역사회 협력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광영 기자

## 여야 3당,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여야 3당은 14일 오는 20일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시간여 동안 논의한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박 원내수석이 전했다.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20일, 더민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1일,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오는 23일부터 29일 사이에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받고 7월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성주 기자